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IR-20110224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

- 02 조사개요
- 03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
- 08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
- 23 이명박 정부 인사 평가 및 제언
- 26 <별첨표>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1년 2월 10일 까지 44개 기관 즉, 청와대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등 15부 및 산하 18청 (총 44개 기관)의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공직 89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해당직위에 임명(및 내정)된 사람이 총 230명(중복)이고 31명이 (2개 직위에 임명된 경우 19명, 3개 직위에 임명된 경우 6명) 중복되어 임명되어 199명이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 참고 자료 : 조사대상 인사의 임명/재직/퇴직 시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인사청문회 자료 및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참고로 하였다.

○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보은인사란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본선 등의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을 준 인사를 공직에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 돌려막기인사란 정치적 실패를 몰어 경질했거나 정책실패가 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 계속 임명한 경우를 말한다.
- 회전문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사대상의 공직 임명 전 경력과 퇴직 후 경력, 임명·인사청문회 당시의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조사하여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인물을 선별하였다.

○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을 44개 기관의 89개 고위공직에 임명된바 있는 199명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하였고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전체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기관별 조사 대상인원은 별첨한 <표8>과 같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

○ 이명박 정부는 초기 내각구성 부터 도덕성 검증이 되지 않은 측근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편중)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외부전문가와 사적네트워크 중심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내각구성과 회전문인사와 이해관계자를 다수 기용하고 인사청문회 등 검증과정을 참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인물을 임명했다.

○ 개각 이후의 인사에서는 여당의 요구 등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내각 참여가 늘어나고, 관료 등의 기용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실패가 계속되었다.

○ 인사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마음의 빔을 공직의 제공으로 갚고자 하는 보은인사,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 또다시 기용하는 측근 돌려막기 인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인사를 다시 기용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정된 인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청와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하고 시민단체, 야당,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인사를 수차례 강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은 상당수가 임명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표1>와 같다.

○ 이명박 정부 55번의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대법관과 합참의장의 청문회 제외)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30번으로 제일 많고 탈세 및 체납(건강보험 포함)이 27번, 병역의혹이 19번, 위장전입이 14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슷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로 내정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전검증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직위에 내정하고도 임명하지 못하거나(9명) 조기교체된 경우도 많았으며, 임명되었지만 인사청문회가 아예 무산(5번)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10번)도 다수 존재하였다.

<표1>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번호	성명	직위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적 문제 (이중국적, 국적 포기)	논문 (중복 게재, 표절)	병역 의혹 (본인 포함)	탈세 및 체납	허위 경력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장 전입	그 외
1	한승수	국무총리	○			○			○	○	
2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		
3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							▪ 국적포기 딸 건보 피부양자 등록
4	김경한	법무부 장관	○			○					
5	이영희	노동부 장관	○			○		○			
6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					
7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8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9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		○			
10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	▪ 97년 대선 여론조사 유출 의혹 ▪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정치권과 유착 물의
11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			○	○				▪ 사제단 "삼성에서 정기상납" 주장 ▪ 국정원장후보로 거론되던 시점부터 두 달간 기업으로부터 25억 모금
12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	○		○				▪ 공금유용의혹 ▪ 82년 정화사업 유공 훈장 ▪ 美국적 딸 건보 피부양자 등록
13	이만의	환경부 장관			○		○			○	
14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					
15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					
16	남주홍	통일부 장관	○	○		○					▪ 부당소득공제 ▪ 이념적 편향성 논란

17	박은경	환경부 장관	○	○							
18	이춘호	여성부 장관	○			○					
19	전재희	보건복지가족 부장관	○				○				▪ 배우자 건강보험료 미납
20	장태평	농림수산물 부장관							○		
21	김항식	감사원장				○	○			○	▪ 긴급조치5호 관련 유신판사 논란 ▪ 대법관 임기 만료 전 감사원장 내정(사법부 독립성 훼손) ▪ 감사원장 취임 전 권한남용
22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 불법 전별금 의혹 ▪ 외대 편입학 비리 개입 의혹
23	윤증현	기획재정부장 관	○				○				▪ 로펌의 고액 연봉 논란 (이해충돌가능성)
24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								▪ 용사참사 책임론 ▪ 측근 인사 논란
25	현인택	통일부장관	○	○	○		○			○	▪ 교통법규 12차례 위반
26	이달곤	행정안전부장 관		○			○				▪ 국가공무원법 겸직금지 위반 ▪ 재산 은닉 의혹 ▪ 소득세법 위반
27	강희락	경찰청장									▪ 코드 인사 논란 ▪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혹
28	천성관	검찰총장	○			○			○	○	▪ 스폰서 검사 논란 ▪ 인사청문회 위증
29	백용호	국세청장	○				○				▪ 전문성 논란 ▪ 코드 인사 논란
30	김준규	검찰총장					○			○	▪ 친인척 수사 외압 의혹
31	김태영	국방부장관									
32	이귀남	법무부장관	○				○		○	○	▪ 삼성 비자금 떡값 검사 논란
33	임태희	노동부장관					○		○	○	▪ 공무원 교육훈련법 위반 ▪ 자녀의 주식투자 의혹
34	최경환	지식경제부장 관	○			○	○				▪ 고액 후원금 댓가성 논란
35	백희영	여성부장관	○			○	○				▪ 전문성 결여
36	주호영	특임장관	○				○				▪ 국가공무원법 겸직금지 위반

37	정운찬	국무총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겸직금지 위반 ▪ 인사청문회 위증
38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				○		○	
39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 전문성 결여 ▪ 정치적 임명 논란
40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		○			○	
41	이현동	국세청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중립성 여부 논란 ▪ 지역편중 인사 ▪ 표적감찰 논란
42	조현오	경찰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소유 발언 ▪ 거액의 조의금 ▪ 인사청탁
4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보장 특혜 의혹 ▪ 수익증권 수익과다 의혹 ▪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44	이재오	특임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해양조선 사장 연임로비 연루 의혹 ▪ 아들, 사위의 취업청탁 의혹
46	진수희	보건복지부장 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동생의 조경사무소 특혜 논란 ▪ 비정상적 재산 증식 의혹 ▪ 한국국적 포기 자녀의 건보 혜택
47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의 위장취업 ▪ 음주운전 전력 ▪ 스폰서 논란
48	김태호	국무총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인사청문회 위증 ▪ 스폰서 의혹 ▪ 부인의 관용차 사용 ▪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 유류비 개인 사용 ▪ 도청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사용 ▪ 선거자금 10억원 대출 특혜 의혹
49	이재훈	지식경제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로펌 자문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남용(딸 논문실문을 위해 정책과제로 포장) ▪ 음주운전
50	김황식	국무총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남용 (감사원 직원을 배우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함) ▪ 동신대 국고지원 특혜 의혹 (누나가 동신대 총장) ▪ 4대강 감사 발표 지연 논란
51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주 투자 논란
52	정동기	감사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전관예우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사찰관여
53	김관진	국방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법 위반 ▪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54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형성 과정 의혹
55	최종경	지식경제부장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학비 국고 지원 특혜 의혹
	총계		30	9	7	19	27	4	9	14	

-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2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에 임명했으며 각각 기재하였음.

1. 보은 인사 - 고마운 사람에게 공직을

○ 보은인사란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본선 등의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을 준 인사를 공직에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보고서에 지적한 보은인사가 그 자체로 모두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경선-선거과정을 통해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공직에 취임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직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다음 <표2>에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인물 중 보은 인사로 볼 수 있는 인물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보은인사는 조사대상의 직위 외에 좀 더 주목을 덜 받는 자리이거나 공기업의 대표자, 또는 감사 등에 임명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후보 정부특보와 전라남도대책위 청년본부장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전남순천에서 낙선한 김기룡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표2> 보은 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성명	대선 이전	대선 이후	임용 공직	비고
1 강만수	안국 포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 시 제9대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원장 (05~07)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 시 한나라당 일류국가비 전위원회 제1공약위원회 위원장 (경제부분 공약 마련)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 관 (09.02~)	환율정책 실패 로 여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 으나 공백 없 이 경제특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으 로 임명됨
2 광승준	국제전략연구원 (GSI)에 서 핵심멤버로 활동 대선 캠프 공약 총괄 간 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 원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 (08.02~08.06)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 원회 위원장 (09.01.~)	촛불집회 정국 으로 국정기획 수석 사퇴, 08 년 08월에 미

				한국경제교육협회 (KEEA) 고문 (09.03.~)	래기획위원장 내정설이 알려 져 청와대 부 인했으나 결국 09년 1월 임 명
3	김대식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비서 실 네트워크 팀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 한나 라당 전남지사 낙선, 한나라 당 전당대회 출마 낙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08.06~10.03)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 장 겸 사무처장 (11.01~)	
4	김해진	세종로 포럼 간사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이 명박 후보 언론특보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원회 언론특보, 상황분석 실 팀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선거 공천 탈락	한국철도공사 감사 (08.07~10.07)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10.08~)	
5	류우익	국제전략연구원(GSI)활동 한반도대운하공약 작성	대통령 취임연설 초안 작성 등 대표적 브레인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08.02~08.06)	
6	박영준	이상득 국회의원의 및 의원 보좌관 이명박 서울시장 정무보 좌역 선진국민연대 네트워크팀 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괄팀장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탈락	청와대 대통령실 기획조 정 비서관 (08.02~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09.01~10.08) 지식경제부 제2차관 (10.08~)	민간사찰 배후 로 지목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제 2차관으로 임 명
7	박형준	제17대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 원 제18대 한나라당 부산 수영 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08.06~09.08)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 관 (09.09~10.07)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 관(상근특보) (11.01~)	
8	신재민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간조선 편집장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메시지팀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08.03~09.0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09.04~10.08)	(전)문광부 장 관 후보자, 부 인의 위장취 업, 위장전입 이 드러나 문 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9	이영희	인해대 법대 교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자문위원 한국경총 자문위원 한나라당 부설 초대 여의도연구소 소장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08.02~09.09)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 의조정위원회 위원장 (10.10~)	
10	정진석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자민련 대변인 제16대 국회의원 (자민련) 제17대 국회의원 (무소속) 국민중심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입당	제18대 한나라당 공주.연기 공천 탈락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8번)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10.07~)	
11	정동기	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 변호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07년 8월, 대검 차장검사 재직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소유 관련 “증거없다”고 발언, 07년 11월 20일 대검 퇴직, 11월 26일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로 취업. 감사원장 후보자로 고액의 전관예우 급여 관행이 문제가 되어 자진 사퇴
12	최시중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고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08.03~)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09.08~10.12)	

2. 돌려막기 인사 -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또 다른 공직을

○ 돌려막기 인사란 한 번 공직을 맡았다가 정책실패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외부의 비판으로 인하여 교체하고도 또다시 주요 공직에 기용한 경우를 말한다. 보은인사와 돌려막기 인사 같은 인사기용에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 또는 공직의 적합성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을 기준으로 자리를 보장하여 정책의 성공과 실패, 외부의 비판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돌려막기 인사의 기용은 인사교체의 원인이 된 정책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의 실수 또는 실패로 인해 모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겠지만 공직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 2008년 외환위기 당시 기획재정부가 성장일변도의 고환율정책을 고수하여 물가인상 등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물러났지만 그 책임자들은 국가경쟁력위원장, 경제특보(강만수), 필리핀 대사,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으로 재기용되었다. 경제정책 실패인사의 재기용으로 시장과 국민에게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작동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환율개입국가로 지목¹ 하고 개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표3> 돌려막기 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경질사유/정책실패/도덕성관련	재임용 공직	비고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환율정책 실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 관 (09.02~)	
2	곽승준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 (08.02~08.06)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부동 산 투기와 해명과정의 거짓 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 원회 위원장 (09.01.~)	2008년 8월 미래기획위원 회 위원장 (장 관급)에 내정 된 것으로 알 려졌으나 청와 대에서 내정설 부인. 결국 2009년 1월 임명됨.
3	김병국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08.02~08.06)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부동 산 투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도덕성-불법행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장 (10.06~)	
4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08.03~08.08)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임명 과정부터 논문표절, 건강보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 업통합감독 위원장	

1 2011.24. 미 재무부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소득세 등 불법 행위	(09.04~)	
5	류우익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08.02~08.06)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주중대사(09.12 ~)	
6	민동석	한미FTA 쇠고기협상 수석 대표 (08.04)	쇠고기 수입 협상 실패 책임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 (08.11~10.10) 외교통상부 제2차관 (10.10~)	
7	박영준	청와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08.02~08.06)	인사전횡에 대한 여당 내에서의 교체요구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09.01~10.08) 지식경제부 제2차관 (10.08~)	민간사찰 배후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기용
8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08.03~09.0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09.04~10.0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감사, 방송 인터넷 발언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압력이 계속되었으나 문화관광부 제2차관에서 제1차관, 장관까지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사퇴
9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 (08~10.07)	언론위압, 농지법 위반, 거짓해명,	대통령실 언론특별보좌관 (상근특보) (11.01~)	
10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08.03~08.10)	쌀직불금 부정수급시도, 부동산투기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 원장 (10.02~)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연구위원 (10.03~)	
11	정동기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과정에서 인사검증실패 책임,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압력행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전)감사원장 후보자-고액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사퇴
12	정운천	농림부 장관 (08.02~08.08)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책임, 촛불정국 책임, 자치단체장 지지건의 강요	총리직속 새만금 위원회 위원	한식재단 이사장
13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08.03.~08.07)	무리한 교환을 기조 등 정책 실패	필리핀 대사 (09~10.04)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10.04~10.12) 지식경제부 장관 (11.01~)	

3. 회전문 인사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도 공직을

○ 회전문 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전문 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회전문 인사는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나 공직자의 기용에 비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직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거나, ▲연구활동에 매진했거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의원과 같은 선출직으로 활동을 하거나, ▲짧은 공직공백기간으로 기용되어 공직공백기간을 통한 이해충돌가능성이 적은 경우도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협회/변호사 등과 같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인물만을 회전문 인사로 구분하였다. 또, 별도로 공직공백기간에 공기업에서 활동한 경우는 별도의 표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이사나 취업등을 통해 드러나는 활동을 한 경우도 있으나 법률회사나 기업의 고문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최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낙마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는 공직수행 후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관예우로 인해 고위공직에 다시 기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낙마했다. 이해충돌가능성이 문제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인수위원회 참여 후 연봉이 크게 올라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져 이해충돌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4>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공직 외 주요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후 경력
1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97~98)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05~07)	무역협회 부회장 (99~00)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03)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09.02~)	공직 유지
2	강윤구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수석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01~0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장 (02~03) 보건복지부 차관 (03~04)	(99~01)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06.01~08.06)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 (07.01~08.06)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장 (08.01~08.06)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08.06~09.08)	(10.03~)
3	김경한	법무부 차관 (99~01) 서울고검 검사장 (01~0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02~08) 코오롱 인터내셔널 사외이사 (02) GS건설 사외이사 (04) 두산 사외이사 (06) 하이닉스 반도체 사외이사 (07)	제60대 법무부 장관 (08.02~09.09)	KH법률연구소 대표이사
4	김성호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부장검사 (95) 사법연수원 부원장 (01)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04.01~05.07)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05) 제58대 법무부 장관 (06.08~07.08)	변호사 김성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07~08)	제29대 국가정보원 원 장 (08.03~09.02)	재단법인 행복 세상 초대 이 사 장 (09.06.~) 법치주의수호 국민연대 운영 위 원 장 (09.12.~)
5	김필규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 사 (04~05)	김필규 법률사무소 변호사 (05~08)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 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08.03~)	공직 유지
6	김희선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05)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5) 두산건설 사외이사 (07)	국가정보원 제2차장 (08.03~09.02)	김앤장 법률사 무소 변호사 (09.10~)
7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05.06~07.02)	우리금융지주 회장 (07.03~08.06)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 관 (08.06~09.01)	동부건설 사 외이사 (10.04~) KT 사외이사 후보 (11.02.10. 현 재)
8	박성도	국가정보원 정보판단실 실장 (05)	SK에너지 상임고문 (05) SK해운 감사 (08~09)	국정원 제2차장 (09.02~10.09)	국정원장 특별 보좌관 (10.10~) (주)셀트리온 부회장

					(11.01~)
9	변무근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정 부 작 전 참 모 부 장 (99~01) 해군 교육사령관 (02~03) 해군 소장 예편 (03)	현대중공업(주) 상무 (03.08~06.12)	방위사업청장 (09.01~10.08)	자료 없음
10	서동원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 (01)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06)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장 (08.03~09.08)	국민경제자문 회의 민간연구 위원 (10.03.~) 김앤장 상임고 문 (10.08.~) 클리포드 찬스 법률사무소 초 빙고문 (10.03 이 전~)
11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실장 (97) 아시아개발은행이사 (99)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 원장 (04~07)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8)	기획재정부 장관 (09.02~)	공직 유지
12	윤진식	산자부 장관 (03) 산업대 총장 (04~07)	단국대 이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 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 (08)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 관 정책실장 (09.09~10.05)	제18대 국회 의원 (10.07~)
13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 (06) 산업자원부 제2차관 (07~08) 지식경제부 제2차관 (08.03~09.01)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9.05.~10.07) 한나라당 인천부평을 당협협 의회 조직위원장, 4.29 부평 을 재보선 낙선 (09)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사퇴 (10.08)	녹성장위원회 회 위원 (10.10~)
14	정동기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 사 (02) 법무부 차관 (06)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변 호사 (07)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 관 (08.06~09.0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전)감사원장 후보자 (10.12)
15	최경환 ²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실 보좌관 (97)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 담당관 (98~99)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99~0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02.04~02.09) 서울은행 사외이사 (02) 이회창 대통령후보 경제특보	지식경제부 장관 (09.09~11.01)	18대 국회의 원 (08.05~)

			(02)		
16	한승수	13,15, 16대 국회의원 34대 상공부 장관 (88~90) 15대 주미 대사 (93~94)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 원 장관 (96~97) 30대 외교통상부 장관 (01~0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4) 한국신용정보 사외이사 (05)	제39대 국무총리 (08.02~09.09)	김앤장 법률사 무소 고문 (09.10~) 스탠더드차터 드 그룹 비상 임이사 (10.01~) 맨스필드 재단 이사 (10.04~) 글로벌녹생성 장연구소 이사 회 의장 (10.06~)

<표5> 공공기관/공기업 회전문 인사 (가나다 순, 선출직 공무원 포함)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공직 외 주요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후 경력
1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05)	-	한국도로공사 사장(07) (공기 업) 국토해양부 제1차관 (08.03~10.08)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 문
2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 국 국장 (06.04~07.08) 재정경제부 정책홍보 관리실 실장 (07) 기획재정부 차관보 (08.03)	-	제16대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09.02~10.12) (공기업) 기획재정부 제1차관 (08.07~09.0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 (10.12~)
3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05) 금융감독위원회 부위 원장 (06) 재정경제부 1차관 (07.02~08.02)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08.09~11.01)	금융위원회 위원장 (11.01.~)	공직 유지
4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	(사)새만금코리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직 유지

2 최경환 장관은 17,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였음.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에 임명된 경우이나 민간활동경력을 감안하여 전형적 회전문인사에 포함하였음.

		산업본부장 (08~09.02)	정책특보 (09.03~) (사)세계김치협회 자문위원 (09.08~) (사)한국식품과학 회 식품산업발전 위원회 위원 (10.03~)	초대원장 (09.09~10.08) (공 공기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원 자문위원 (10.03~) (공공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10.08~)	
5	진동수	조달청장 (05.07~06.05) 재정경제부 제2차관 (06.05~07.07) 한국수출입은행장 (08.07~09.01)	(사)한국금융연구 원 초빙연구위원 (07)	금융위원회 위원장 (09.01~10.12)	자료 없음
6	최장현	해양수산부 공보관 (00) 해양수산부 차관보 (0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본부 본부장(07)		제9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공기업) (08.07~09.01) 국토해양부 제2차관 (09.01~10.08)	자료 없음

4. 인사실패사례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주요직위에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낙마한 공직자는 다음<표6>과 같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도덕성의 문제로 인해 낙마하였다.

○ 인사실패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은 해당직위의 임명을 위해 내정되었으나 임명되지 않거나 초기에 경질된 경우다. 보고서에서는 본래 조사대상으로 해당직위에 임명된 경우만을 범주로 하였으나 낙마한 인사들은 인사실패에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로 <표6>으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의 조사대상 조상대상직위에 중복하여 내정된 신재민, 이재훈, 정동기의 경우도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나 각종의혹으로 취임 한달만에 경질된 인사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 <표6>에 포함하였다.

<표6> 인사실패사례 (가나다 순) - 임명철회(후보사퇴) 또는 조기경질

성명	예정 직위	내정일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관련	낙마 사유 (낙마일)	낙마 이후 경력
----	-------	-----	--------------------------------	----------------	----------

1	김석기	경찰청장	09.01.18	청문회 전 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 (09.02.10)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09.05~11.01) 오사카 총영사 (11.02~)
2	김태호	국무총리	10.08.08	청문회 중 후보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연차 게이트 의혹 인사청문회 위증 건설업자 스폰서 의혹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부인의 관용차 사용 시인 유류비 개인사용 도지사 재직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 선거자금 10억원 대출 특혜 의혹 (10.08.29)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원 연구원 (10.10.~)
3	남주홍	통일부 장관	08.02.15	청문회 전 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이중국적 부당소득공제 논문발표 횟수 조작 병역면제 이념적 편향성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08.02.27)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09.12~)
4	박미석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08.02~08.05)	08.02.10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표절 시비 부동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거짓 자경확인서 제출 (08.04.27) 	숙명여대 교수 청계재단 이사 (09.07~) (재)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이사장 (10.04.~)
5	박은경	환경부장관	08.02.14	(08.02.27 (청문회 전 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장전입 절대농지 매입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08.02.27) 	한국물포럼 총재 (09~)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 (09.12~)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 (11.01~)
6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8.08	청문회 (10.08.24)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관 재직시 YTN 사태 개입 논란 탈세 	자료 없음

				(10.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전입 ▪ 부인의 위장취업 ▪ 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 음주운전 전력 ▪ 자녀의 펀드 증여세 탈루 의혹 ▪ 스폰서 논란 	
7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10.08.08	청문회 (10.08.20) 채택일 (10.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남용 논문작성 의혹 ▪ 고액 로펌 자문료 ▪ 음주운전 ▪ 쪽방촌 투기 의혹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0.10~)
8	이춘호	여성부 장관	08.02.18	청문회 전 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 의혹 ▪ 재산 축소 신고 의혹 	KT 사외이사 (09.0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사 (09.03~) EBS 이사, 이사장 (09.09~)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08.10~) (사)DMZ미래연합 상임대표 (10.02~)
9	정동기	감사원장	10.12.31	청문회 전 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연봉 전관예우 논란 ▪ 감사원 독립성 논란 	자료 없음
10	천성관	검찰총장	09.06.21	청문회 (09.0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전입 의혹 ▪ 인사청문회 위증 ▪ 스폰서 검사 논란 ▪ 자녀 병역비리 의혹 	법무법인 로월드 상임고문 변호사 (10.01~)

○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따라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고위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청렴경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낙마하지 않고 살아남은 많은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운’ 또는 ‘복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있다. 김석기씨는 오사카 총영사, 남주홍씨는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박은경씨는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로 재기용 되었다. 또, 이춘호씨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에 다시 기용되었다. 이재훈씨는 후보직에서 자진사퇴 뒤 두달여 만에 녹

색성장위원회 위원(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또, 낙마한 사람 중에는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기용된 사람들도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서울경장철장 역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지식경제부 차관 역임),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역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민정수석 역임)는 인사청문회 전에도 주요직위에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위직을 유지했을 것이다. 용산사태에 책임을 지고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석기씨를 인사청문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로 적합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로 이런 인물들이 고위공직자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덕성에 대한 인사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신재민씨는 차관에 임명되었을 때는 위장전입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도 전이었고 제1차관을 거쳐 장관에 내정되어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려 장관에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는 ‘왕비서관’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왕차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을 넘어서는 권력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으나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권력에 너무나 근접해 있어 견제를 받고 있고 민간인 사찰의 핵심인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장관직에 임명하지 않고 ‘실세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인사청문회 채택에는 여야간의 기싸움 같은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할 수 있지만, 국회가 몇몇의 직위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는 진행하지만 인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임명된 경우도 다수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 또한 국회 고유의 역할임을 상기할 때, 국회가 적합하지 않은 인사로 판명하거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함은 물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공직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7>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인사 (가나다 순)

	성명	임명 직위	청문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사유	재직 기간	퇴직 후 경력
1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08.0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표절, 중복게재 논란 ▪ 공금유용 거짓 해명 ▪ 부동산 투기 논란 ▪ 자녀의 한국 국적 포 	08.03.13~08.08.06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0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논란 ▪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논란 ▪ 5공 정화사업유공훈장 		
2	김성호	국정원장	08.03.07, 18(무산), 자동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떡값 논란 ▪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부터 두달간 기업으로부터 25억 모금 	08.03.~09.02.	재단법인 행복세상 초대 이사장 (09.06.~)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운영위원장(09.12.~)
3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09.0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결여 ▪ 부동산 투기 의혹 ▪ 세금 탈루 의혹 ▪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 	09.10~현재	공직 유지
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08.07.11 인사청문 요청 (무산) 08.09.02 (국회 상임 위 인사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표절 의혹 ▪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 불법 전별금 의혹 ▪ 외대 편입학 비리개입 의혹 	08.08.06~10.0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11.01~)
5	이귀남	법무부장관	09.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차명보유, 차명거래 의혹 ▪ 위장전입 ▪ 삼성 비자금 떡값 검사 논란 	09.09~현재까지	공직 유지
6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	09.09.15 (무산) 09.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결여 ▪ 위장전입 ▪ 부동산 불법 전매 및 세금 탈루 의혹 	09.09~10.07	대통령 실장 (10.07~)
7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08.07.11 인사청문 요청 (무산) 08.09.02 (국회 상임 위 인사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신고 누락 	08.08~10.08	솔로몬저축은행 사외이사 (10.09~)
8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08.07.11 인사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 	08.08~10.08	제18대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요청 (무산) 08.09.04 (국회 상임 위 인사검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논란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논란 		
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08.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 ▪ 부동산 투기 ▪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 ▪ 위장전입 의혹 ▪ 군복무중 탈영 의혹 ▪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 ▪ 방송의 중립성 훼손 문제 제기 ▪ 5공세력 협조 논란 	08.03~현재 까지	공직 유지
10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11.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IMF 사태 및 2004년 환율 정책 실패 ▪ 부동산 투기 ▪ 세금 탈루 ▪ 편법 증여 ▪ 자녀 학비의 국비지원 특혜 논란 ▪ 재산세 체납 ▪ 국민연금 미납 	11.01~현재 까지	공직 유지

1. 보은 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 지양해야

○ 이명박 정부의 3년간의 인사를 모니터한 결과 대선과정에 도움을 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기용하거나, 한번 기용한 측근 인사가 정책에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를 다수 찾아 볼 수 있었다. 대선과정에서 공약과 정책마련에 참여한 인사들과 공직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아니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앞장섰다는 이유로 도덕성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공직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직에 재기용에 재기용 하는 것도 국민들과 시장에 정책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 회전문 인사는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해당부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업무적응기간이 짧은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회전문 인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앞서 본 것처럼 많은 인사실패를 경험했다. 검증하지 못한 잘못된 인사는 공직공백기간을 늘리고 국정혼란을 부른 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인사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를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있다. 김석기씨는 오사카 총영사, 남주홍씨는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박은경씨는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 이춘호씨는 EBS이사장에 재기용되었다. 고위공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물을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에 재기용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기능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인물의 낙마로 공직희망자로 하여금 '청렴경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후보자를 사퇴시키고도 인사청문회가 없는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인사과정에서 국회의 의견 존중해야

○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10번에 달한다. 조사대상

으로 삼은 직위의 인사청문회가 55번 열린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이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5번이나 된다.

○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또한 고유의 역할이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 없이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검증과정을 통해 고위공직에 부적합한 인사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다른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공직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국민 눈높이 보다 낮은 검증 기준 강화해야

○ 신재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낙마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가 알고 있었으나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알려졌다. '공직윤리-도덕성'에 대해 청와대의 기준이 국민들의 기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직윤리에 대한 검증 기준을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참여연대의 회전문인사보고서(2010.7.15.)에 따르면 회전문 인사의 경우 재산이 퇴직하여 민간에서 일할 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를 다수 발견 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에는 공직재임기간에 불성실한 등록을 했거나, 퇴직 이후에 전 관예우 등의 혜택을 받아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검찰재직 이후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받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과도한 연봉을 받았고, 특히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이후 연봉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어 낙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의 낙마과정에서 여당이 불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사실상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회의 검증권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바 있다. 앞으로는 청와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앞서 실시하고 더 철저한 국회의 검증을 요청하고 국회의 인사검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등 인사기준 만들어야

○ 현재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스폰서검사 논란으로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몇몇은 민정수석실도 배제하고 밀실에서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 추천과 검증, 공직 기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을 신설하였으나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거듭되는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증시스템의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당시 낙마한 정동기 후보자 또한 감사원장에 내정되면서 “대통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내부검증에 들어가고 감히 어떤 수석도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검증하지 못했으나 결국 다시 낙마하기도 했다.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는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인사검증의 시기, 검증사항, 범위 등을 제도화,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정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폐기된 법률안을 기초로 ▶인사검증 대상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검증을 할 때에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대상자의 배우자 존비속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관료로 활동하다 퇴직 후에 업무관련 기업에 취업하여 과도한 연봉을 받거나 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별첨표>

<표8> 보고서의 조사 대상 및 인원 (중복)

*2011년 2월 10일 현재 기준

대상 기관		대상 직위	전직 인원	현직 인원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10개 직위	20	10
감사원		원장	2	0
국가정보원		원장 및 1,2,3차장	6	4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및 총리실장, 국무/사무차장	7	4
특임장관실		장관, 차관	2	2
법제처		처장	1	1
국가보훈처		처장, 차장	1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4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3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3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	2
기획재정부		장, 차관	6	3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세청, 조달청	청장	각 2	각 1
	관세청, 통계청	청장	각 1	각 1
교육과학기술부		장, 차관	6	3
외교통상부		장, 차관	5	3
통일부		장, 차관	2	2
법무부		장, 차관	3	2
법무부 산하기관	검찰청	청장	1	1
국방부		장, 차관	4	2
국방부 산하기관	병무청	청장	1	1
	방위사업청	청장	2	1
행정안전부		장, 차관	6	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찰청	청장	2	1
	소방방재청	청장	1	1
문화체육관광부		장, 차관	5	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문화재청	청장	1	1
농림수산식품부		장, 차관	6	3
농림수산식	농촌진흥청, 산림청	청장	각 2	각 1

품부				
산하기관				
지식경제부		장, 차관	6	3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청, 특허청	청장	각 1	각 1
보건복지부		장, 차관	4	2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식약청	청장	1	1
환경부		장, 차관	1	2
환경부 산하기관	기상청	청장	2	1
노동부		장, 차관	3	2
여성가족부		장, 차관	4	2
국토해양부		장, 차관	3	3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각 2	각 1
소계			141	89
합계			44개 기관	230명

- 해당직위 230명 중 2개 직위에 임명된 19명, 3개 직위에 임명된 6명을 제외한 총인원은 199명
- 2개 직위 중복 19명 : 강희락, 김동수, 김성환, 김재수, 김황식, 맹형규, 민승규, 박영준, 신각수, 신재민, 원세훈, 이귀남, 이용걸, 이재오, 임채민, 임태희, 진영곤, 천영우, 하영제
- 3개 직위 중복 6명 : 김대기, 박재완, 백용호, 이주호, 장수만, 최중경

※ 본 보고서를 위한 기초조사는 오유진 자원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10223

발 간 일 | 2011. 02. 24 (총 27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정현백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서울시립대 교수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장정욱 선임간사)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꾼다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